

가전제품 특소세의 존폐

— 가전정보제품 경쟁력 약화·소비왜곡 초래 —

정부가 PCTV·인터넷TV 등 첨단정보 가전제품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가전제품 특소세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부과되고 있는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해야 하는 이들 첨단제품에 대해 특소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가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초래한다며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가전제품의 특소세를 쉽게 없앨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가전제품의 특소세는 지난 95년 기준으로 8,100억원정도로 전체 특소세의 35%에 달했다. 더욱이 올해 세수가 3조원이상 줄어들 것이란 전망을 감안하면 더욱이 이를 폐지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업계는 컬러 TV, 냉장고, 세탁기 등의 보급율이 이미 100%가 넘는 생활필수품으로 정착되고 있는 마당에 사치품으로 분류,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특히 호화사치품인 모피·보석의 경우 100만원이하면 이를 면제해 주면서도 대부분이 100만원미만인 가전제품에 특소세를 고집하는 것은 산업경쟁력강화라는 정부정책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고는 특소세인하 추진을 위한 본회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게재된 내용이다.

특별소비세는 지금으로부터 꼭 20년전인 1977년에 부가가치세가 도입되면서 세수확보와 단일세율화에 따른 역진성을 해소하고 사치성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저축증대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돼 그동안은 어느정도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국민소득 1만불시대

그러나 경제발전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를 넘어서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로 과거에 사치성소비재라고 인식되었던 가전제품들이 이제는 우리가정에서 꼭 필요한 생활필수품으로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발전이 늦어지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훨씬 커진 상황이다.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첫째로 가전제품은 더이상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으로 특소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컬러TV나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은 이미 보급율이 100%를 넘어선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이다.

특소세가 처음 시행된 지난 77년만해도 컬러TV 등 가전제품의 보유자는 전체의 2%미만으로 고소득층이 아니면 갖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보급율이 100%를 넘어 소비를 억제해야 할 사치품이 아니라 가사노동의 경감과 특히 여성지위의 향상, 국민문화 생활향상, 정보화사회의 촉진 등을 위해 그 보급을 오히려 장려해야 할 시기다.

둘째로는 과세형평상의 문제가 있다. 가전제품은 100만원이하의 생필품에도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호화사치품의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모피, 보석 등의 경우 100만원이하의 제품에는 특소세가 없어 품목간 형평성을 잃고 있다.

셋째로는 기술집약산업인 신홍정보 가전산업에까지 무차별한 특소세부과로 미래수출산업과 기술개발의 싹을 키울 수 없다는 점이다.

성장주도 산업육성

최근 정보화바람이 산업사회로부터 가정과 국민생활로 확산되고 디지털기술이 출현해 통신, 방송, 컴퓨터가 융합되어 멀티미디어, 즉 인터넷TV, DVD(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새로운 정보화 가전제품이 등장하면서 미국, 일본 등 선진 각국은 물론 싱가포르, 대만 등 개도국까지 국력을 쏟아넣고 있다.

천연자원이 빈약한데다 시장은 좁고 인구가 많은 우리 산업여건을 감안하면 신홍정보 가전산업이야말로 21세기에 우리나라의 가장 유망한 산업임에도 정책적 육성은 고사하고 특소세로 인해 시장기능에 의한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넷째로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이 가전제품에 고율의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어 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물류·임금·금리·땅값 등 이른바 4고로 인해 생산비용이 높아진데다 간접세까지도 선진국과 경쟁국에 비해 20~30%가 높

아 해외시장에서 경쟁이 어려워 수출저조, 실업증가, 기업도산 등 일련의 총체적 경제위기에까지 와 있지 않는가.

다섯째로는 가전제품의 보급, 확대가 국민문화생활의 향상은 물론 주부들의 가사노동 경감, 여성인력의 사회진출, 특히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일손부족에 기여하고 있다면 가전제품의 특소세가 이를 저해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생산비 갈수록 증가

시대가 변화되어 소득수준과 생활방식이 달라지면 당연히 사치품과 생활필수품의 개념과 품목도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세수확보와 행정편의에만 집착하다보니 20년전보다 부과했던 가전제품의 특소세를 지금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도시 저소득층과 농어촌지역에는 가전제품 보급이 크게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면 가전제품에 고율의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소비의 왜곡을 가져와 국민경제적으로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케되는만큼 가전제품의 특소세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지금 우리 가전업계는 안으로는 경쟁력 약화, 밖으로는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추격이 가속화되어 수출둔화, 내수침체, 수입증가, 채산성 악화 등의 4중고를 겪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21세기를 내다보고 고부가 가치의 디지털 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에 있는 힘을 다 쏟아넣고 있지만 아직도 역부족인 듯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이제 정부도 각계각층의 고통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또 소비자물가의 안정화라는 차원에서 가전제품의 특소세인화 및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본다.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의 획기적인 개선은 정보화 사회 혁신에 촉진제가 될 뿐 아니라 전자정보산업이 성장주도산업으로서, 또 기술선도산업으로서 앞으로 우리 경제의 제2도약을 이끌어 낼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